

3대 '게임체인저'에 3.4조 투입... 유니콘 벤처지원 16조 책정

‘국가 AI컴퓨팅 센터’ 상반기 착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 계획
‘한국판 디즈니’ 육성 본격 추진 발표
K-관광 휴양벨트 9개소 신규 구축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4’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방문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뉴시스

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포함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

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 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 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자율주행택시 주간에도 달린다... 소상공인 폐업 신고 간소화

정부, 11개 규제 혁신 과제 발표
운영 시간 확대 및 대수 증가
바이오·수소 등 기술규제 완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운영됐던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에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모빌리티, 데이터, 수소 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시범운행 지구 16.5㎢ 구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오후 11시~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는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은 오는 7월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해 허가하고, 운행 대수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

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트럼프 철강 25% 관세에... ‘제3국 우회 덤핑’ 차단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

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

회덤핑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 입법예고

기재부, 오는 5월 국회 제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도록 세부사항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내

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 세부담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배우자 사망으로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상속세가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